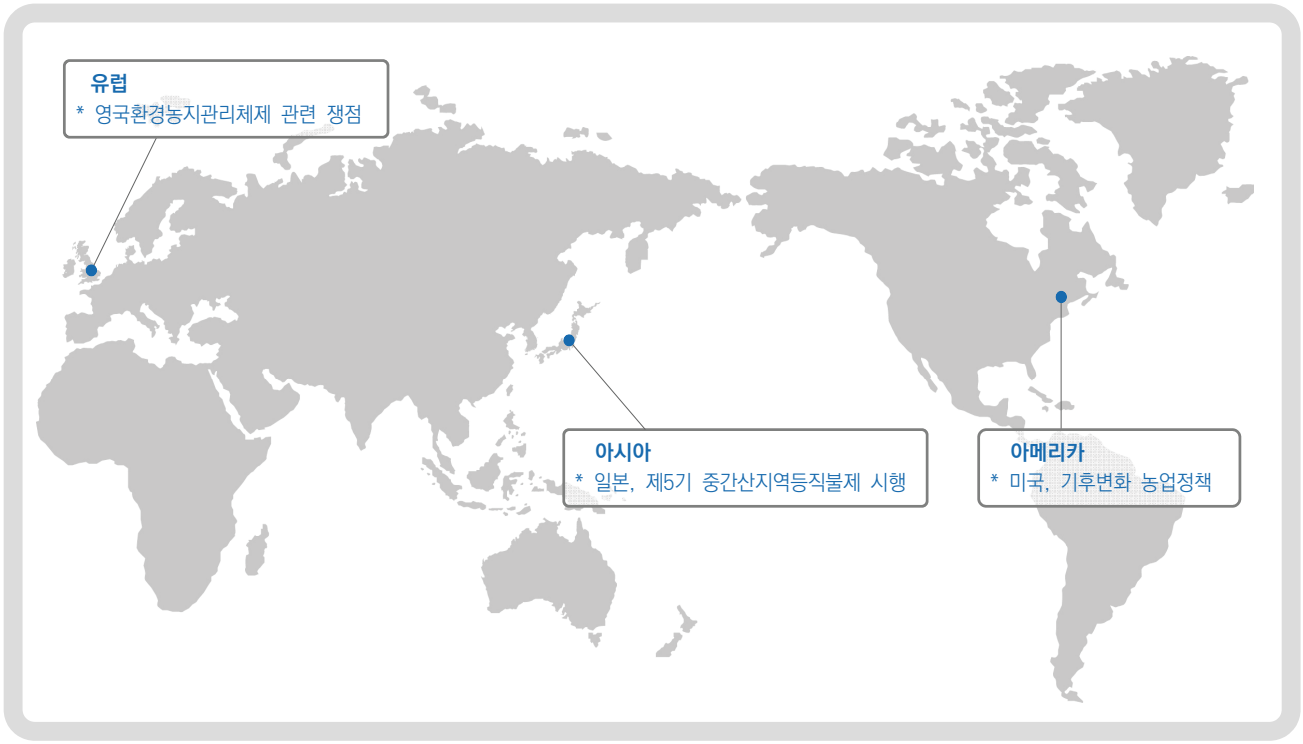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2020. 2.)



1 미국, 기후변화 농업정책[1)]

〈기후변화가 농가에 미친 영향〉

■ 미국 남부 지역 농가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음.

- 사우스캐롤리아나주, 조지아주의 복숭아 농가, 플로리다주의 감귤 농가, 조지아주 비달리아의 양파 농가 등은 기록적인 낮은 온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음.

■ 기후변화의 변동성 확대는 곡물 단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축산농가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확대해 미국 농업 경제를 악화시킴.

1) 미국 National Sustainable Agriculture coalition의 "A Call for Climate-focused Agriculture Policy"(2019.11.18)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2020. 2.)

〈농업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

■ 농업은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아산화질소(N2O) 배출로 기후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아산화질소는 토양으로부터 비료나 개간 작업을 통해 배출되는데, 미국환경보건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하면, 2017년 미국 총 아산화질소 배출량의 74%가 농업 토양으로부터 배출됨.

- 온실가스는 미국의 공장식 밀집 사육(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CAFOs)에서 나온 물거름(liquid manure)을 통해 다량 배출됨.

- 또한 토양에 탄소가 다량 저장되어있는 숲이나 초원을 경작지로 개간하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침.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정책〉

| 미국 지속가능 농업연맹이 제시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정책 |

1. 농업 기후 중립적 생산을 목표로 한 생산자 지원
2.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방해하는 요소는 제거하고 향상시키는 요소에 대한 지원 확대
3. 아산화질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경영 지원
4. 쓰레기와 유기성 폐기물의 물거름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정책 지원
5. 탄소가 많이 저장된 토양이나 지형을 보호하는 제도 개편
6.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공장식 밀집 사육에 대한 지원 철폐와 환경친화적인 가축생산시스템 지원
7. 농업 내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 정책 지원
8. 환경에 민감한 농업에 대한 식물·동물 육종 연구 지원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유럽, 영국환경농지관리체제 관련 쟁점[2)]

■ 새로운 영국 농업법안이 2020년 1월 16일 영국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테레사 빌리어스(Theresa Villiers)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장관은 올해(2020년) 여름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함.

- 영국 정부는 2021년부터 기존 직불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2027년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2024년부터 시행될 환경농지관리체계(ELMS)는 농가와 계약을 통해 환경적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조할 것임.

- 이번 법안은 주로 직불제 폐지와 EU 탈퇴에 따른 행정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음.

- 2014-17년 영국 농가 수익 중 직불금 비중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식품농촌부는 자국 농업인들이 직불제 없이 생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

- 또한 농업 지원액 규모를 2024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해 왔음. 그러나 현재 의회 임기가 끝나면 2025년부터는 지원액 규모가 축소될 위험이 있음.

- 2021년에는 기존 수령액이 컸던 농가일수록 수령액 감소율이 클 것으로 보이나,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직불제 축소가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음.

- 3만 파운드 이하 수령 농가는 지원금이 5% 감소, 15만 파운드 이상 수령 농가는 지원금이 25% 감소될 예정임.

- 새롭게 시행될 환경농지관리체계에서 주목할 점은 농지 규모와 지원액 간의 연관성이 사라지는 것임. 농업인이 지원액을 자본 투자에 사용할지,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영국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생물다양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경관 개선과 같은 환경농지관리체계 도입 취지는 환영할 만하나 현재 시행 중인 CAP 농촌개발프로그램과 비교 시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음. 또한 농업인들이 실제 수령하게 될 금액 수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IEG Policy가 발표한 "Five questions for the UK government as it launches its farm policy gamble"(2020.1.16.)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3 일본, 제5기 중간산지역등직불제 시행[3)]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0년부터 중산간지역등직불제 제5기 대책을 시행함.

- 중간산지역등직불제는 경사지가 많아 생산조건이 불리한 농지에서 5년 이상 농업 생산 활동을 할 경우 조건에 따라 교부금이 지급됨. 중산간지역 휴경지 발생을 방지하여 적절한 농업 생산 활동 유지를 통한 다원적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간지역 농지 7만 5,000ha의 휴경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임.

- 제5기 대책에서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뚜렷한 중산간 지역 등에서 농업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 2020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261억 엔으로 대상 면적을 유지·확대할 수 있을지가 과제임.

■ 현행 기준 휴경지가 발생한 경우, 협약한 시점부터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 직불금 반환을 우려하여 협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2020년부터 규칙을 바꿔 휴경지 면적 분에 한하여 협약체결 시점부터 수령한 직불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함.

■ 현행 기준 직불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① 농작업위탁 등에 의한 휴경지 발생 방지, 야생동물 대책 등의 농업생산활동 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해당 조건만 이행 시 직불금의 80%만 지급), ② 농기계 공동이용 등 장기적으로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 정비 활동(해당 조건까지 이행 시 직불금의 100% 지급)의 조건이 있었음.

- 제5기 대책에서는 체제 정비 활동 조건을 6~10년 후 마을 미래상 명확화·공유하는 지역전략을 작성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함.

■ 새로운 인력 확보, 영농 이외의 조직과 연계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기능 강화 추가지급금, 농지 단지화·규모화 및 소득향상, 드론을 이용한 약제 살포 등의 노동력 절감기술을 도입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생산성·부가가치향상 추가지급금을 신설하여 각각 단위면적당 3,000엔을 지급함.

3) 일본농업신문 「中山間直払い第５期対策 返還措置の面積緩和 耕作放棄発生分だけ」(2020.1.15.), 일본 농림수산성「中山間地域等直接支払交付金 令和2年度予算概算要求の概要」(검색일, 2020.1.1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2020. 2.)

■ 광역 지역협정을 맺어 지역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집락협정광역 추가지급금조건을 완화함. 복수지역에서 지역협정을 맺는 경우 단위면적당 3,000엔을 지급하며, 계단식 논 지역진흥법의 성립에 따라 지정 계단식 논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0.).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